

# 노동시장 불평등과 가구소득 불평등<sup>1)</sup>

*Individual Earnings Inequality and  
Household Income Inequality*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글은 소득 불평등의 영향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년대 불평등이 증가한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소득불평등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단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불평등 영향 요인으로는 임금률, 근로시간, 고용률 등의 노동시장 요인, 노인 인구의 증가, 가구 구성과 가구내 노동공급, 비근로소득, 재분배 정책을 고려하였다. 개인의 경제활동 자료와 가구 단위의 소득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노동 참여와 가구 단위의 소득 공유를 통해 불평등을 억제하던 기능이 약화되고,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증가하긴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불평등 증가가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의 주된 원인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불평등을 억제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1. 머리말

어떠한 지표로 측정하던 최근의 소득 불평등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높게 나타난다. 소득 분배의 변화에는 개방화, 기술변화, 정책과 제도, 노동시장 상황,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 가구의 노동공급, 자산 가격의 변동, 복지지출의 변화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따라서 어느 한 요인의 인과관계로만 불평등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 글은 소득 불평등의 다양한 영향 요인들을 고려하여 불평등이 증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

는 시도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소득 불평등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단계적 분석방법(step-wise approach)을 사용하였다. 소득 불평등 영향 요인으로는 분석 자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한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임금률, 근로시간, 고용률 등의 노동시장 요인, 노인 인구의 증가, 가구 구성과 가구내 노동공급, 비근로소득, 재분배 요인을 고려하였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임금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 증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고용률이 증가하면 불평등에 어떤 영

1)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한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이병희(2014), “2000년대 소득불평등 증가요인 분석: 단계적 분석방법”, *경제발전연구* 20(1), pp.73-103을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향을 미치는지, 노인 인구의 증가가 불평등을 얼마나 심화시키는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불평등을 억제하는지, 재산소득은 불평등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재분배 정책의 불평등 억제 효과는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등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정책 선택과 우선순위는 달라질 것이다. 이 글은 정책적인 선택을 위한 탐색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목적을 위해 개인의 경제활동 자료와 가구 단위의 소득 자료의 결합자료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과 항목의 다소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필요한 개인별 소득 및 고용 정보와 가구의 소득 및 특성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진 자료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다. 두 시기간의 비교정태적인 분석이므로 분석 시기는 2000년대가 된다<sup>1)</sup>. 2000년대 초반에 다소 감소하던 소득 불평등 수준이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률이 소폭 증가하던 2000년대 중반에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 2. 선행 연구

소득불평등의 추세와 원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별 요인의 인과

관계로 소득불평등의 증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가구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 주목한다. Gottschalk & Danziger(2005)는 임금 불평등 연구와 가구소득 불평등 연구가 별도로 이루어져왔음을 비판한다<sup>2)</sup>. 노동경제학은 가장 좁은 소득개념인 개인별 임금 분포의 변화에 집중하여, 기술 변화· 해외 경쟁· 노동시장제도와 정책 변화 등이 임금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여 왔다. 반면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사회정책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져왔으며, 재분배 정책에 집중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1975~2002년을 대상으로 개인별 임금, 개인 근로소득, 가족 근로소득, 가족 균등화 소득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남성의 임금 불평등과 가구 소득 불평등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추이를 보이지만, 이것이 남성의 임금 불평등 증가가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기에 따라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이나 비근로소득 등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임금 불평등과 가구 소득불평등 간에 개입하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그들은 강조하고 있다.

Salverda & Haas(2013)는 그 동안의 임금 불평등 연구와 소득 불평등 연구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sup>3)</sup>. 임금 불평등의 분석 단위는 근로자 개인인 반면 소득 불평등은 가구 단위다. 또한 임금불평등 연구는 노동의 가격인 임금률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당 임금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소득

2) Gottschalk, Peter and Sheldon Danziger(2005), Inequality Of Wage Rates, Earnings And Family Income In The United States, 1975-2002,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1(2), pp.231-254.

3) Salverda, Wiemer and Christina Haas(2013), Earnings, Employment and Income Inequality, Salverda, Wiemer et al. (Eds), *Changing Inequalities and Societal Impacts in Rich countries: Analyt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unpublished.

불평등 연구는 연간 소득을 사용하여 근로시간으로 측정되는 노력의 차이를 반영한다. 그리고 분석의 초점도 임금 불평등 연구에서는 교육과 같은 인적 특성, 산업·직업 등의 일자리 특성, 노동시장 제도가 상대 임금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루는 반면 소득 불평등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의 배분, 빈곤과 연관된 소득의 충분성, 가구간 소득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재분배정책의 효과를 주로 다룬다. 그들은 임금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간의 관계를 규명하여야만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근로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가구소득 불평등 심화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면서 소득 불평등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근로소득 불평등을 주목하게 되었고, 둘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OECD(2011)는 가구소득 불평등이 임금 불평등과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sup>4)</sup>. 프랑스·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임금 불평등이 증가하여 왔으나, 가구소득 불평등은 나라마다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함께 고려한 연구로 두 연구가 대표적이다.

장지연·이병희(2013)는 1996~2011년에 걸친 소득불평등의 증가를 임금 불평등, 노인 인구 증가, 가구의 노동공급, 재분배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sup>5)</sup>. 가구유형별 요인분해, 소득원천별 요인분해, 가구 단위의 노동공급과 다양한 소득원천을 고려한 요인분해 등의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

하여, 지난 15년간 불평등 증가의 요인들을 규명하고 있다. 첫째, 지난 15년간 불평등 증가는 노인가구 증가의 영향도 있지만, 근로연령가구의 불평등 증가가 더 주된 요인이다. 둘째,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소득불평등을 더 이상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셋째, 소득불평등 증가의 주된 요인은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소득 불평등 확대다. 분석자료로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11년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소득 자료와 월간 소득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불평등 증가를 과소 추정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다양한 요인분해 방법을 적용하여 불평등 증가에 대한 각 요인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장점이 있지만, 불평등 확대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강신욱(2012)은 불평등 증가의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sup>6)</sup>. OECD(2011)가 제안한 방법을 수정하여,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 불평등을 기준으로 다른 집단과 다른 소득범주를 추가함으로써 지니계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불평등이 증가한 외환위기 직후 시기와 2000년대 후반 시기를 비교하여, 2000년대 후반에 도시 가구의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미취업 가구주의 존재, 배우자의 취업, 노인 가구의 증가 등은 불평등을 확대하는 반면 지역업 가구주의 사업소득과 기타 가구원의 노동소득, 기타 가구 소득, 재분배정책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 불평등이 전체 가구소득의 불평등에서

4) OECD (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Paris: OECD.

5) 장지연·이병희(2013),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선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3년 상반기(23), pp.71-109.

6) 강신욱(2012), 2000년대 후반 불평등 심화의 특징,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가장 주된 요인이며,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여타 요인들도 근로소득 불평등 심화의 경향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조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시 2인 이상 가구로 한정되어 불평등 수준과 추이가 과소 측정되는 한계가 있으며, 개인별 고용 및 소득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개인 단위의 노동시장 불평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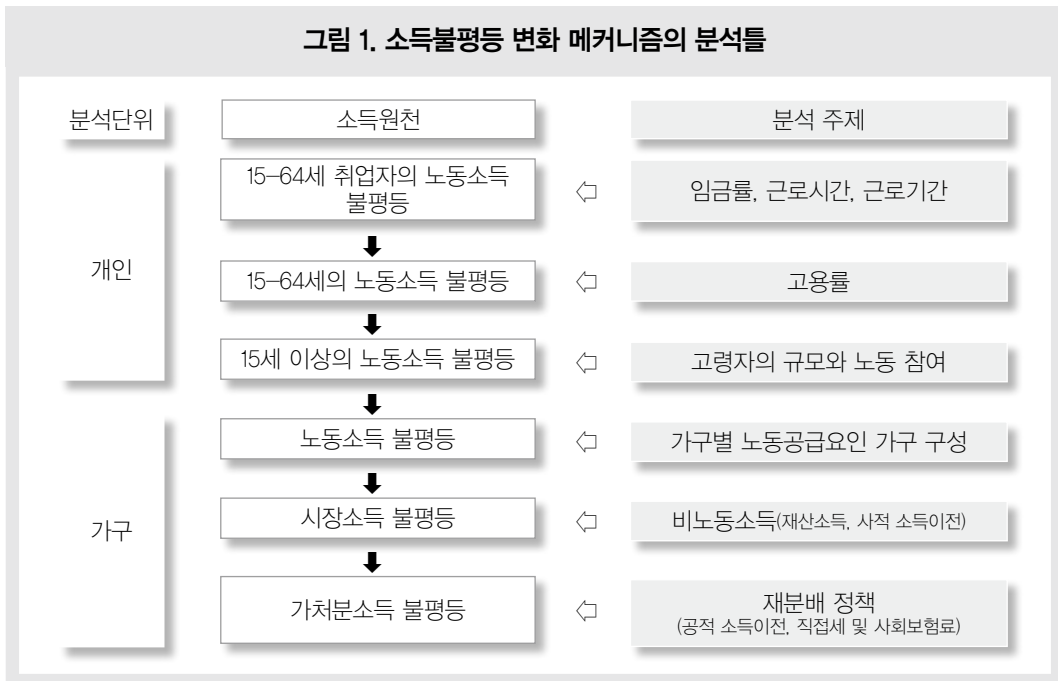
### 3. 분석 방법

불평등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해(factor decomposition)하거나 모의실험(simulation)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인구 집단

또는 소득원천별로 불평등 지표를 요인 분해하거나 관찰년도의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기준년도의 분포를 적용하여 가상적인 불평등 변화를 측정하는 모의실험 방법은 특정한 요인의 불평등 기여를 엄밀하게 분석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OECD(2011)가 제안한 분석틀, 즉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소득 불평등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한 집단의 소득 불평등을 기준으로 다른 집단 및 소득원천을 하나씩 추가함으로써 소득불평등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강신욱(2012)이 지적하듯이, 분석의 출발점과 다양한 요인들을 어떤 순서로 추

그림 1. 소득불평등 변화 메커니즘의 분석틀



가할 것인지에 따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배열 순서는 OECD(2011: 27)처럼 취업자 개인의 노동소득 불평등을 출발점으로 하여 가구의 가처분소득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분석단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sup>7)</sup>.

첫째 단계에서는 15~64세에 속한 취업자의 노동소득 불평등을 분석한다.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간의 이행이 잦고 부업을 가진 사람들도 늘어나지만, 연간 단위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살펴 보았다. 개인이 일을 통해 획득하는 노동소득의 불평등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반영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비취업자를 포함한 개인 전체로 확장하였을 때 노동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고용률의 변화가 개인 단위의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셋째 단계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추가하여 고령자의 취업을 변화와 고령자노동소득 불평등의 영향을 살펴본다. 이어서 넷째 단계에서는 소득을 공유하는 단위인 가구로 분석단위를 확장하여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살펴보았다. 소득계층별로 가구 내에서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어느 정도인지,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노인을 포함한 피부양 가구원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개인 단위의 노동소득 불평등이 가구 단위의 노동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다섯

째 단계에서는 노동소득 이외에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사적 이전소득의 분포에 따른 영향을 시장소득 불평등을 통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단계에서는 직접세와 사회보험료, 공적 이전소득이 소득계층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시장소득 불평등과 가처분소득 불평등간의 차이만큼이 재분배정책의 효과다.

[그림 1]의 단계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동시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여성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은 노동시장 불평등만이 아니라 가구내 노동공급 행태, 조세 및 복지정책 등의 다양한 단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개별 요인들 자체가 변화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임금 불평등에서 가구소득 불평등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장점을 가진다. 요인들의 배열 순서에 따라 영향이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지만, 동일한 배열 순서로 불평등 수준의 변화폭을 두 시기별로 비교함으로써 개별 요인들의 영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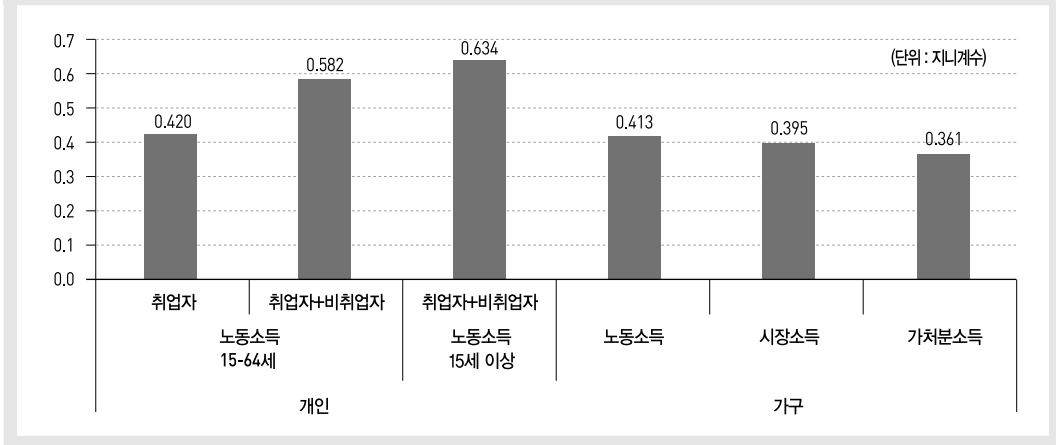
이 글에서 소득불평등 지표로는 주로 지니계수를 사용한다. 지니계수는 단기간에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시계열 변화가 크지 않지만, 모든 계층의 소득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된다는 장점이 있다(강신욱, 2012).

7) 그러나 OECD(2011)가 분석틀에 맞추어 일관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분석대상을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였지만, 단계별로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최종적으로 종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한편 OECD 연구는 현물급여가 가구 소득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을 마지막 단계에 추가하고 있음.

8)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제공하는 가처분소득은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으로, 이 연구의 정의와 차이가 있음. 이 연구에서는 재분배정책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경상소득에서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 비소비지출을 차감하여 가처분소득을 구하였음. 그리고 음의 가처분소득은 0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개인별 고용 및 소득 정보를 제공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복지부문'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를 구하였음.

그림 2. 단계별 불평등 수준

(단위: %)



## 4. 분석결과

### 1) 불평등 수준의 영향 요인

개인 노동소득 불평등을 출발점으로 하여 가구 가처분소득 불평등으로 확대하기까지 불평등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을 때 불평등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그림 2]는 보여준다. 2011년 가구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0.361으로 나타나는데<sup>8)</sup>, 영향 요인별로 보면 비취업자와 노인 인구를 단계적으로 추가하면 불평등이 높아지고, 가구의 노동시장 참여와

그림 3. 단계별 불평등의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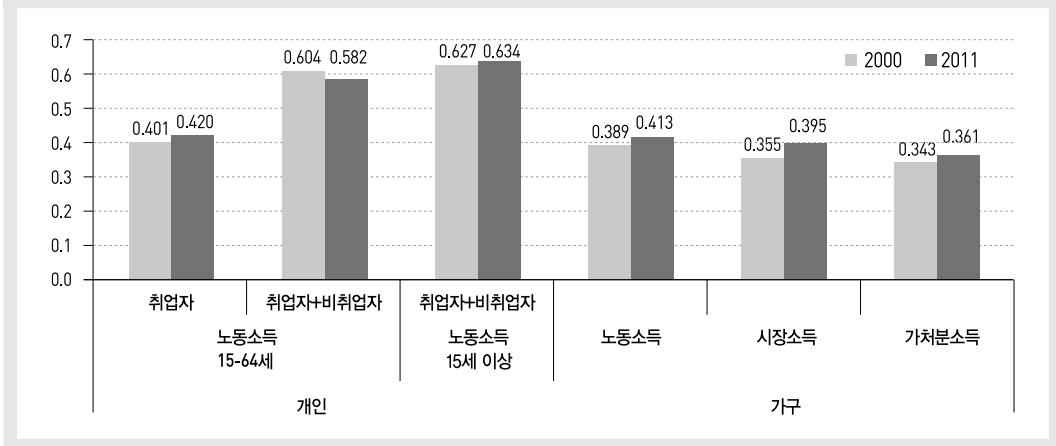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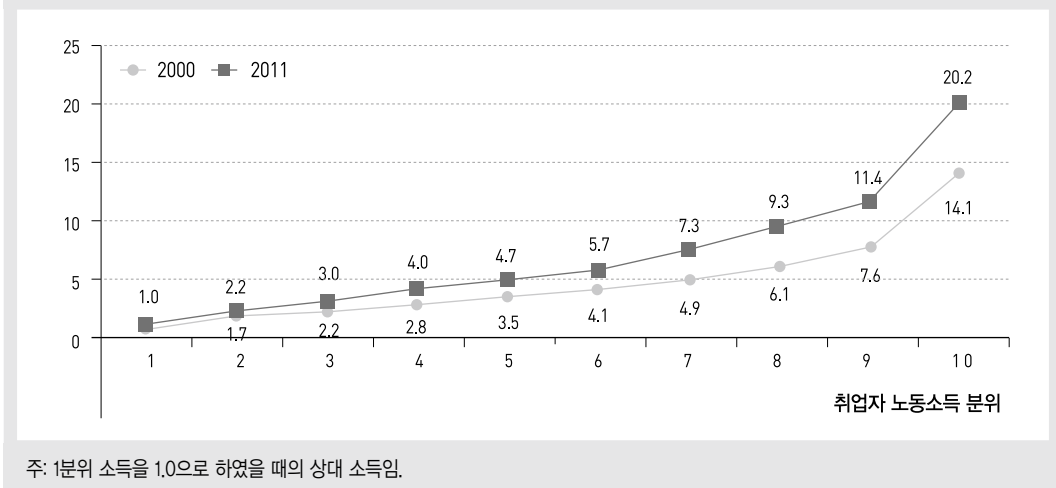


그림 4. 10분위별 노동소득의 상대 변화



소득 공유, 비노동소득, 재분배 정책은 불평등 수준을 하락시킨다.

## 2) 불평등 증가의 영향 요인

소득 불평등의 영향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불평등 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가 [그림 3]에 종합하여 제시되어 있다. 가구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2011년 0.361으로, 2000년 0.343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러한 불평등 증가에 어떠한 요인들의 영향이 컸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노동소득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지니계수로 측정한 취업자의 노동소득 불평등은 2000년

0.401에서 2011년 0.420으로 증가하였다<sup>9)</sup>. 노동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그림 4]의 분위별 소득격차의 확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취업자의 노동소득을 10분위로 나누어 하위 1분위의 소득을 1.0으로 하였을 때 분위별 상대소득의 변화를 보면, 10분위의 상대소득은 2000년에 14.1배에서 2011년 20.2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고용률이 증가하면 소득 불평등은 하락한다. Atkinson & Brandolini(2006)은 전체 생산연령인구의 노동소득 불평등을 취업자의 임금 불평등 변화와 고용률의 변화로 분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u$ 를 비교용률,  $e = (1 - u)$ 를 고용률,  $I_w$ 를 취업자의 노동소득 불평등도로 정의하면, 전

9) OECD(2011)에서 25~64세의 근로자와 자영자를 포함한 취업자의 조(gross) 노동소득을 보고한 12개국의 2000년대 중반 지니계수의 평균값은 0.372로 나타난.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임금 불평등이 매우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크게 증가한 나라인 점을 고려하면, 자영자를 포함한 취업자의 노동소득 불평등도 외국에 비해 높을 것으로 생각함.

10) OECD(2011)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기간의 24개 OECD 국가들의 LIS 자료를 이용하여,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면, 고용률이 1% 증가할 경우 생산연령인구의 지니계수가 0.65% 감소하며, 취업자의 지니계수 1% 증가는 생산연령인구의 지니계수를 0.61% 증가시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체 생산연령인구의 노동소득 불평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I = u + (1 - u)I_W$ . 즉, 전체 지니계수는 비취업자의 노동소득을 0이라고 가정하고, 비고용률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고용률로 다시 표현하면,  $I = 1 - e + eI_W = 1 - (1 - I_W)e$ 로 나타난다. 즉, 전체 노동소득 불평등은 고용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취업자들의 임금 불평등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sup>10)</sup>. 이제 두 시기간 지니계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Delta I = e\Delta I_W - (1 - I_W)\Delta e$ . 첫째 항은 임금 불평등의 변화로 인한 '임금 효과'이며, 둘째 항은 고용률의 변화로 인한 '고용 효과'<sup>11)</sup>.

이 방법을 적용한 분석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비취업자를 포함한 개인 전체의 노동소득 불평등은 2000년 0.604에서 2011년 0.582로 하락하였다. 앞서 살펴 본, 취업자의 노동소득 불평

등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 전체의 노동소득 불평등이 하락한 것은 유급 취업 여부로 정의한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률의 증가폭이 다른 조사에 비해 과다하고<sup>12)</sup>, 고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sup>13)</sup>, 분석결과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고용률 증가의 노동소득 불평등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셋째, 65세 이상을 추가할 경우 불평등 수준의 증가폭은 크게 증가하였다. 노인 인구의 증가 자체 만으로도 불평등 수준은 큰 폭으로 증가한다.

넷째, 가구(가족)는 소득의 공유와 가구별 노동공급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감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배우자의 취업이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지의 결정은 가구주의 소득에 크게

표 2. 개인 노동소득 불평등과 고용률(15~64세)

	2000	2011	변화
취업자의 지니계수	0.401	0.420	0.019
유급 고용률	0.637	0.720	0.082
개인의 지니계수	0.604	0.582	-0.022
임금효과			0.012
고용효과			-0.049
오차			0.015

11) Atkinson, Anthony B. and Andrea Brandolini(2006). From earnings dispersion to income inequality, Farina, Francesco and Ernesto Savaglio (Eds.), *Inequality and economic integration*, London: Routledge, pp.35-62.

12)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5~64세 가구주·배우자의 유급 고용률(무급가족종사자 제외)이 2000년 63.9%에서 2011년 68.9%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이 연구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특정 시점의 고용률이 아닌 지난 1년간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률이므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증가폭은 과대한 것으로 보임.

13) 2000~11년 동안 32개국의 고용률과 임금불평등의 변화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고용률이 증가하였지만 임금 불평등도 가장 크게 증가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이병희(2014) 참조.



표 3. 가구주 취업 여부 · 소득분위별 유배우자 비중 및 배우자의 취업률

가구주 취업여부	가구주 소득분위	유배우자 비중		배우자 취업률	
		2000	2011	2000	2011
비취업	평균	0.483	0.461	0.177	0.156
취업	평균	0.773	0.736	0.380	0.420
	1	0.534	0.476	0.467	0.362
	2	0.590	0.516	0.504	0.378
	3	0.640	0.582	0.480	0.434
	4	0.724	0.657	0.442	0.472
	5	0.778	0.747	0.452	0.480
	6	0.802	0.783	0.427	0.474
	7	0.851	0.842	0.377	0.463
	8	0.880	0.877	0.350	0.419
	9	0.932	0.893	0.284	0.403
	10	0.944	0.942	0.217	0.312

의존하므로, 가구주의 취업 여부, 취업하였을 때 가구주 소득 분위에 따라 유배우자의 비중과 배우자가 있을 때의 취업률을 살펴보았다.

<표 3>을 보면, 가구주가 취업한 경우에 비해 비취업 상태였을 때, 유배우자의 비중이 낮고 배우자의 취업률이 낮은 특징을 가진다. 시기별로는 2000년에 비해 2011년에 더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가구주의 소득수준과 배우자의 취업률간의 관계는 크게 변화하였다. 2000년 배우자의 취업률은 가구주의 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통해 가구소득을 보충함으로써 가구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이다. 반면 2011년에는 가구주의 소득이 중간 분위인 경우에 배우자의 취업률이 높으며, 하위 분위

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중간 분위 배우자의 취업이 가구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의 소득분포에 따라 10분위를 매겨서, 가구주와 배우자간 소득의 상관관계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5]를 보면, 가구주와 동일한 소득 분위에 속한 배우자의 비중(상관관계 1)은 2000년 14.3%에서 2011년 15.1%로 소폭 상승하였다. 가구주의 소득 분위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소득 분위에 속한 배우자의 비중(상관관계 2)은 2010년 34.9%에서 2011년 40.8%로 더욱 증가하였다. 고소득 가구주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동류간 결혼(assortative mating)이 증가하면, 가구의 소득불평등 역

그림 5. 일하는 부부간 노동소득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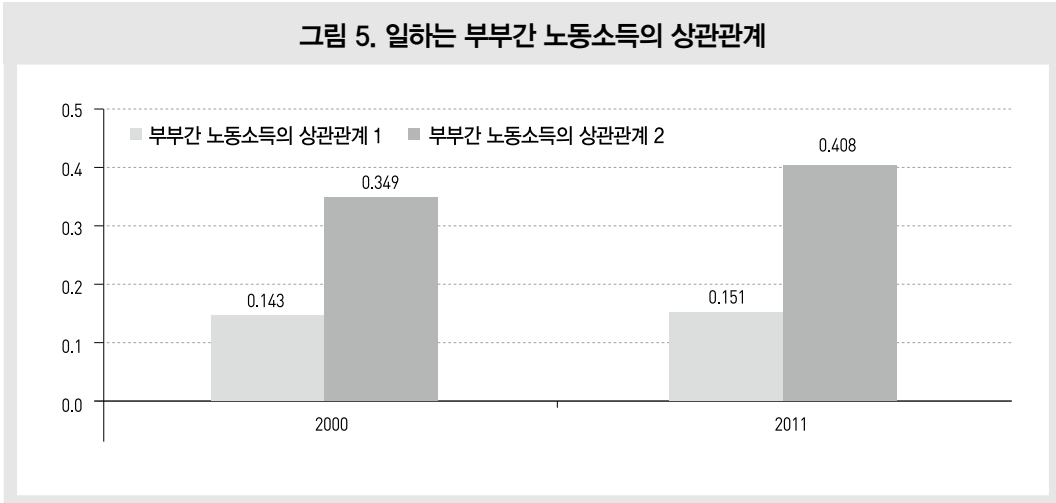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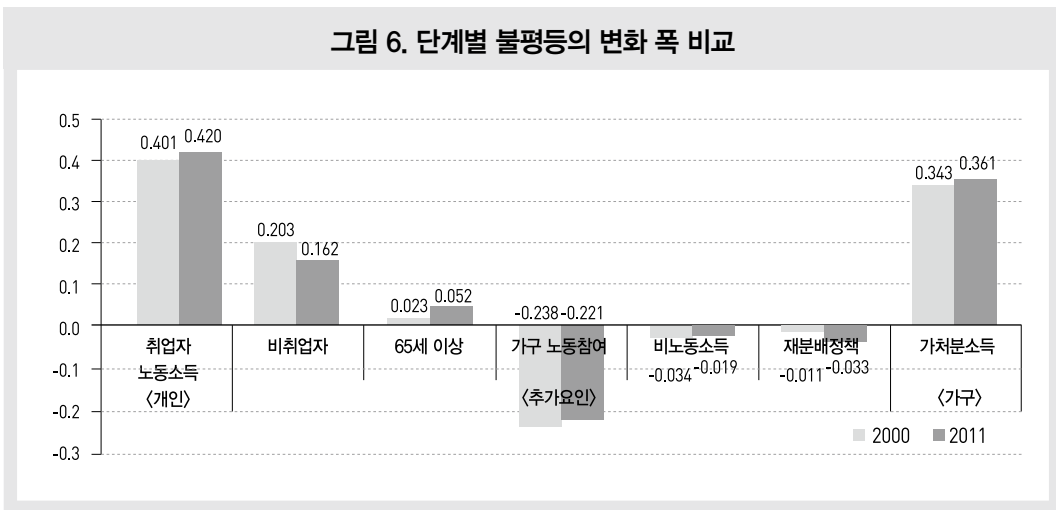


그림 6. 단계별 불평등의 변화 폭 비교



제 효과는 더욱 약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다섯째, 재산소득과 사적 이전소득 등의 비노동 소득 자체의 불평등 수준은 증가하였지만, 그 비중이 하락하여<sup>14)</sup> 가구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감소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노동소득의 불평등 증가와 구성 비중의 증가에 따라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2000년 0.355에서 2011년 0.393으로 증가하였다.

14) 가구조사에서는 재산소득이 과소 조사되는 문제가 있음. 이 글이 사용한 자료에서 재산소득의 비중은 2011년 4.0%에 불과함. 참고로,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에서 2011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재산소득이 순분원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 재산소득(원천) 기준으로 14.6%, 순재산소득 기준으로 8.1%에 이룸.

여섯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에 따라 공적 이전소득에 의한 재분배 정책이 가구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지만, 시장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커서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는 증가하였다.

[그림 6]은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 및 소득원천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였을 때 불평등 수준의 변화폭을 시기별로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주된 특징을 보면, 첫째 취업자의 노동소득에 미취업자를 포함할 경우 불평등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의 증가폭은 하락하였는데, 고용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65세 이상 인구를 포함하였을 때 불평등 수준은 증가한다. 셋째, 개인 단위의 노동소득 불평등은 가구 단위로 통합할 때 소득 공유와 가구별 노동공급을 통해 불평등 수준은 감소한다. 그러나 감소폭은 최근 들어 하락하여, 가구의 불평등 억제 효과가 약화되었다고 평가된다. 넷째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등 비노동소득은 그 구성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섯째, 재분배정책의 불평등 감소효과는 최근 들어 증가하였다.

취업자의 노동소득 불평등에 추가된 요인들의 불평등 변화 효과는 각각 다르지만, 추가된 다섯 가지 요인들의 효과를 합하면 2000년  $-0.058$ , 2011년  $-0.059$ 로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가구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수준이 증가한 것은 개인 취업자의 노동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 5.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이 글은 개인의 경제활동 자료와 가구 단위의 소득 자료를 결합하여, 지난 2000년대 소득 불평등 증가 요인을 분석하였다. 개인 단위의 노동소득 불평등으로부터 가구 단위의 소득 불평등으로 분석 단위를 확대하면서 소득 불평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가구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수준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노동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요인별 영향을 보면, 고용률 증가와 재분배정책의 확대가 소득불평등 증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가 소득불평등 증가를 초래하고, 가구(가족)가 소득불평등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이 줄어들었다<sup>15)</sup>.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연이은 대침체의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Reich(2010)에 따르면, 불평등 확대에 저소득층은 우선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거나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면서 지구적으로 대응하며, 이마저 한계에 부딪히면 저축을 줄이고 가계 부채를 늘리게 된다. 이러한 부채의존적인 성장은 부채 거품이 터져버리면서 경제위기와 생활수준의 급격한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sup>16)</sup>.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중상위 소득가구에서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구의 불평등 억제 효과가 약화

15)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한 OECD(2011)와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고용률 증가의 불평등 감소 효과가 크지 않으며, 여성의 노동 참여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차이로 보임.

16) Reich, Robert(2010). *After Shock*, 안진환·박슬라 옮김(2011).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김영사.

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의 추가적인 증가의 여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또는 가구 단위에서의 자구적인 대응으로 불평등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가계 부채의 증가를 통한 생활수준의 유지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분배 정책의 확대와 노동시장의 불평등 억제가 남은 길일 것이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가구 소득불평등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분배정책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조세정책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을 확대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지

만, 노동시장 불평등을 방지하면서 재분배정책이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동소득 불평등을 상쇄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고용률의 증가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보이듯이, 고용률의 증가를 통해 노동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그 동안 크지 않았다. 불평등을 유발하는 고용 창출로는 고용률을 높이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sup>17)</sup>, 결국 노동시장 규제와 사회적 보호를 결합하여 불안정과 격차를 억제하는 정책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17) 이병희(2013). 대안적 고용모델의 모색, 제7회 대안담론포럼 발표문.